

# 생계형 적합업종 오늘 시행... 소상공인 생계 지켜줄까

‘생계형’ 광범위... 신청난립 우려  
중기단체, 소상공인 90%로 올려야  
민간전문가 15명 심의위원 구성  
영세성·경쟁력 등 고려 지정 결정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켜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호기간을 5년으로 늘렸고, 위반시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벌칙도 부과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강제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생계형’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해질 경우 신청이 붓물을 이루고, 지정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자칫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도 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

심의항목	주요 지표	고려 사항
영세성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업종 내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등
	사업체 소득의 영세성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평균임금 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상공인의 취약성	△소상공인의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영업이익 증감 추이 등
	대기업등의 시장 지배력	△대기업등의 시장 점유율 및 변화 추이 △시장의 규모 및 성장 추이 △규제 및 인허가 등 진입장벽의 정도 등
산업 경쟁력 영향	대내적 영향	△연구개발 투자금액의 비율 및 추이 △시장규모의 증감 추이 △전후방 연관 산업 영향 △특정기업의 독과점 우려 △전문 중견기업에 부정적 영향 등
	대외적 영향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수출 추이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규모 △외국인 투자 영향 △국제적 경쟁 가능성 등
소비자 후생	소비자의 접근성	△재화공급의 형태 및 추이 △연관 기술업종 등의 융복합화 △재화공급의 생산공급 현황 및 역량 등
	소비자의 신뢰성	△관련 규격표준 및 인증제도 △재화공급의 공급상태 등

날부터 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요청을, 중기부에는 지정 신청을 각각 하면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하게 된다.

특별법에선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요건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30% 이상 또는

일정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과 ‘생계형’ 업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가입된 회원사가 총 51개에서 300개 사이인 중소기업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회원사의 숫자가 50개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율이 아닌

숫자로 할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숫자가 적은 단체도 신청 자격이 돼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회원사가 300개인 중소기업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50개만 되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비율로는 17%밖에 되지 않아 신청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낸 논평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아예 9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했고, 신청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

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 지정하는 것인 만큼 지정 여부가 신청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대표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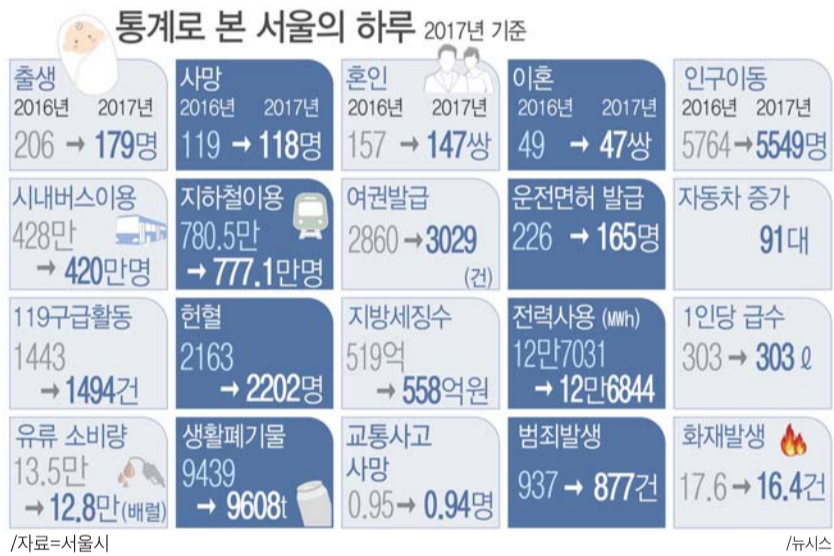
이들은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과 함께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위반에 따른 패널티도 적지 않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을 인수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특히 위법시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서울 하루 출생아 200명선 첫 붕괴

市, 2018 서울통계연보 발표  
지난해 하루평균 179명 불과  
실업률 늘고 혼인 줄어든 탓

서울에서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79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집계 이래 처음으로 일평균 출생인원이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취업이 어렵고, 결혼도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은 늘고 혼인 수는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직전년도 4.2% 대비 0.3% 포인트 증가했다. 2012년 하루 196쌍이던 혼인 수는 2013년 189쌍, 2015년 176쌍, 2017년에는 147쌍으로 내려앉았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서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연보는 2017년 인구·경제·주택 등 20개 분야 340개 주요 통계를 수록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총인구는 약 1012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명 정도 줄어 인구 천만명 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6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57명이던 신생아 수는 2013년 230명, 2016년 206명에서 2017년 179명으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136만5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만4249명 증가했다. 서울시 전체 인구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지금의 추세를 보면, 서울은 올해 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은 25.8%였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6만명, 저소득 노인인은 1만9000명이었다.

서울의 총인구는 지난해 1012만4579명이었다. 2010년 1057만5447명에서 2017년 1012만4579명으로 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 밀도도 낮아졌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2010년 1만7473명/㎢에서 2017년 1만6728명/㎢로 감소했다.

서울 시민의 평균연령은 41.6세였다.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0~14세) 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은 2010년 17.8명에서 2017년 14.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010년 12.4명 부양하던 것이 2017년 17.9명으로 늘어났다.

‘2018 서울통계연보’는 서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1@

## ‘경고등’ 켜진 韓 경제... 文 대통령 나섰다

文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최근 한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면서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2기 경제팀과 함께 경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왔다. 확대경제장관회의의 참석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었다.

## 시중銀, 해외점포 관리 미흡

中國民銀 국제수지 누락보고 등  
유럽 신한銀 특별감독관 파견 조치  
中 하나銀 벌금 총 139만 위안 납부

시중은행의 해외 거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은행 간 생존경쟁이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뒤처지는 요인이자 비용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2020 프로젝트), KB금융(아시아 톱10·글로벌 톱50), 하나금융(2025년까지 국내 1위·아시아 5위·세계 40위), 우리은행(2020년까지 아시아 톱10·글로벌 톱50) 등은 세계적인 은행과 어깨 나란히 한다는 목표로 뛰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상해은행은 올해 4월 5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기재부는 매년 12월 중순을 즈음해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짓고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취임해 하루 만에 대

통령 보고까지 하게 됐다.

김 대변인은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해 밝혔다.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지난 2월 53만 위안(CNY)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은행은 “고객신분확인 미흡 미흡, 혐의거래보고의무 이행 미흡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3월에도 “자금세탁방지 고객신분확인 소홀 등을 사유로 벌금 86만 위안을 납부했다”고 분기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외지점의 제재가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륙별로 세계 100대 은행의 지난 2013~2017년 5년간 평균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75%로 해외 은행 평균인 10.2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호 기자 kmh@